

다산포럼

아직도 8월



성명 전 서강대 철학과 교수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문구, 웬만한 지식인이면 들어서 아는,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의 명제가 유난히 가슴에 와 닿는 시국이다. 어떤 사람이 흔히 쓰는 단어와 어법과 어조는, 그 사람의 지적 능력과 지식수준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정신적 혈통과 종족, 사람됨, 그가 사는 세계를 결정(結晶) 짓는다는 뜻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는 아직도 8월이다. 1945년의 8월에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이웃, ‘한 나라에는 해방의 빛이 비치고, 다른 한 나라에는 패전의 어두움’이 드리웠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 사건은 마·소에 의한

남북 분단과 6·25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한반도는 폐허’로 변했고, 동서냉전의 전장에서 미국의 동맹국이 된 ‘일본은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다.

21세기에 들어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으로 한반도 군사 대결의 긴장이 완화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회담 추진과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한의 화해와 제도약의 시기가 다가오나 싶었다. 그런데 동맹이라고 여겼던 일본의 난데없는 ‘경제침략’으로 한국은 등에 칼을 맞았다. 2019년 8월에!

최근 아베 측근들은 ‘정한’(征韓)이라는 말까지 일에 올린다니 우리 국민에게는 ‘기해왜란’(己亥倭亂)이 일어난 셈이다. 한편 ‘토착왜구’라는 신조어가 조롱하듯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커밍아웃을 기웃거리던 친일세력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친일인명사전’(민족문제연구소)에 이름을 올린 자가 4000여명, 계속 조사 받는 인사들이 4만여 명이라 하니 한반도 일본강점 36년의 흑독함이 묻어난다.

지난,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밝혔다. “일제는 독립군을 ‘비적’(匪賊)으로, 독립운동을 ‘사상범’으로 몰아 탄압했습니다. 여기서 ‘빨갱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사상범과 빨갱이는 진짜 공산주의자에게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자에서 아니키스트까지 모든 독립운동을 낙인찍는 말이었습니니다. 좌우의 적대, 이념의 낙인은 일제가 민족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사용한 수단이었습니니다. 해방 후에도 친일 청산을 가로막는 도구가 됐습니니다. 양민 학살과 간첩 조작,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에도 국민을 적으로 모는 낙인으로 사용했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용인되고 ‘표현의 자유란 우리가 동의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이다’라는 교훈도 있다. 하지만 한국 땅에 살면서, 일제하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바친 애국지사들에게, 해방 후 두 차례 군사반란에 맞서 인권과 민주를 수호한 투사들에게,

춧불혁명으로 집권한 민주정권에 ‘빨갱이’ 또는 유사 언어를 함부로 덧씌우는 사람은, 그가 언론인이든 정당인이든 종교인이든, 학자든 공무원이든 기업가든, 한반도 민족사의 급류를 기운차게 거스르며 자기 혈통 속에 도도히 흐르는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 헤엄쳐 오르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3·1 운동 100주년이란 뜻 깊은 날에 무슨 난데없는 친일·빨갱이 타령이나?”(조선), “‘빨갱이’란 용어 자체가 설사 일제의 독립운동가 탄압 과정에서 생겨났다 해도”(중앙), “‘빨갱이를 빨갱이라 부를 수 없는 나라는 북한과 닮없는 전체주의 국가다”(동아)라는 즉각적 논평은 문 대통령의 언설이 정확했음을 되짚게 했다. 쉽게 배우는 육설처럼 누구에게나 생각 없이 ‘빨갱이’라 내뱉어 온 이들이 제발 정신을 가다듬고, 되도록 그 말에 입에 안 올리기를 바란다. 발설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내 인생에 영구히 깃들어 자자손손 숨 쉬고 머물러 살 집을 엮어 간다는 이치를 이미 알고 있다면.

NGO 칼럼

끝나지 않는 역사, 끝날 수 없는 역사



문기전 광주YMCA 사무총장

지난달 1일 일본의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 두 달이 다 되어가고 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유는 누가 보아도 한국 대법원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음을 판결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 보복을 단행했다는 세계적인 비난을 피하고 싶어서인지 안보상의 이유라고 둘러대며 뚜렷한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자꾸 말을 바꾸고 있다.

이는 결국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 보복을 단행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아베 정부의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명백히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

뜨리기 위한 경제 침탈로 규정할 수 있다.

아베 정부를 비롯한 일본 우익들은 해방된 지 7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36년간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 통치를 합법이라 주장하며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아베 정부는 끊임없이 문재인 정부가 국가간의 약속을 뒤집는 믿을 수 없는 정부라고 비난한다. 그에 대한 근거로 1965년 한일 협정으로 국가간 청구권만 아니라, 개인 청구권까지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의 판결대로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한일 협정에서 개인 청구권의 이야기는 조문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타국과의 개인 청구권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나를 보아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1965년 한일 협정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미국과 소련을 대상으로도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다. 일명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1951년)과 알스 공동 선언(1956년)이 그것이다. 미국의 군사 행동으로 인한 원폭 피해자와 소련의 조치

로 피해를 본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는 개인 청구권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일본의 사법부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해를 본 개인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알스 공동 선언에 포함된 청구권 포기 조항은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하지 않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징용 배상을 위한 개인 청구권이라는 정치적인 문제를 풀고자 일본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다각도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대화에도 나서지 않는 일본 정부를 향해 급기야는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일본의 경제 침탈과 불손한 태도에 대한 당연한 대응인데 일본은 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와 연결하였고 비난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일본의 뻔뻔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태도는 경제강국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도 찾아볼 수 없으며 우리 국민까지도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대응은 보다 냉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베’(NO ABE)를 외치며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일본 여행 안가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은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원점으로 돌릴 때까지 계속 펼쳐 나가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달라야 한다. 앞으로 다쳐 올 경제적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고려하여 초당적으로 여야 협력을 이끌어 내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반도체 소재 부품 분야의 기술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이끌어내는 정책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제적 침탈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감정만으로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일본에 대한 범시민적인 운동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전개할 것이니 정부와 정치권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를 바란다. 총선의 시계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국민들의 눈높이가 그곳에 있음을 여야 정치권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社說

전문성도 없는 인사에 광주 미래 맡겨도 되나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대표에 박광대 전 광주시장이 선임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와 정당 등은 엇그제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인(주)광주글로벌모터스 발기인 총회에서 초대 대표이사로서 박 전 시장을 선임한 데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참여자치 21은 “초대 대표이사에 박광대 전 시장을 선임한 것은 이용섭 시장이 천명했던 전문성과 리더십, 도덕성 등 인사 원칙 중 어느 것 하나 부합하지 않는다”며 즉각 사임을 촉구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소도 웃고 갈 일’이라며 대표이사 선임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이 가장 비판하는 점은 박 전 시장이 재임 중 ‘삼품관장’으로 20억 원을 현금화해 유용한 혐의의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지 이제 겨우 1년이 지났다는 사실이다. 공기업의 경우 집행유예 종료 2년 이내에는 대표를 맡을 수 없게 돼 있는

데, 광주시가 1대 주주인 공공성 강한 법인의 대표로 박 전 시장을 선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완성차 공장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데 박 전 시장과 같은 비전문가이자 비경영인 출신이 최고 경영자로서 사업 초기 산적한 과제들을 제대로 풀어 나갈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참여자치21이 제기했듯 이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 전 시장의 측근과 참모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점을 의식해 이번 선임이 ‘보은 인사’로 이뤄진 것이라면 더욱 안 될 일이다. 지역 사회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지난 5년 여 동안 혼신을 기울여 성사시킨 합작법인의 초대 대표를 검증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이 깜짝 선임한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지금이라도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고 노사민정 대타협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자동차산업 전문가를 대표이사로 재선임해야 할 것이다.

공모사업 번번이 실패... 보다 치밀한 대응을

전남도가 정부 공모 사업인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유치에 또 실패했다. 의욕만 앞설 뿐 공모사업 준비와 대응 전략 마련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먼저 해양수산부는 최근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자로 경남 고성군을 선정했다.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지능화한 스마트 양식 시범 단지화 배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정부는 전체 400억 원 중 양식장과 배후 부지를 조성하는 데만 220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그런 만큼 열악한 지방 재정을 고려할 때 전남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지만 끝내 유치가 실패한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첫 공모 때 신안을 후보지로 내세워 유치가 나섰다가 부산에 밀렸고 이번 공모에서도 탈락했다. 1차 공모 때부터 도전장

을 냈던 부산·경남 고성·신안 중 신안만 유치가 실패하면서 전국 대표 수산도시라는 명성도 무색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에 목표·곡성·순천 등 세 곳이 도전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선정된 19곳 중 전남에서는 한 곳도 포함되지 못한 것이다. 국토해양부의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목포 해면피라 및 갯길 30리’라는 사업으로 도전했던 목포도 탈락했고, ‘e 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에 도전했던 순천시도 탈락의 쓴맛을 봤다.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면 많게는 수백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 정책을 펼치겠다는 공모에 뛰어들고도 잇따라 탈락하고 있는 것은 의욕만 앞선 채 준비가 치밀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쿼비 확보를 위한 치밀한 논리 개발과 함께 대응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흔히 사람들은 산에 가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어차피 내려올 텐데 왜 (산에) 오르냐?”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영국 산악인 조지 맬러리(George Mallory)의 말이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린다. “산이 거기 있으니까.”(Because it is there) 그는 1924년 6월 에베레스트 정상 부근에서 실종됐는데 정상 등정 여부는 미스터 리로 남아 있다.

기자는 지난 11·19일 7박9일간 ‘영·호남 중국 하바설산 원정등반대’와 함께 설산에 올랐다. 하바설산은 중국 윈난성(雲南省) 샹그릴라(香格里拉)현에 자리한 해발 5396m의 눈 덮인 산이다. 양자강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는 옥룡설산(해발 5596m)이 마주 보고 있다. 두 설산 사이 협곡이 그 유명한 후타오샤(虎跳峯)인데, 호랑이가 강을 건너뛰었다는 말이 전해져 온다. ‘하바’는 그곳에 사는 소수민족 나시족 언어로 ‘황금 꽃잎’(金子之花)을 의미한다.

산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마주한 설산의 풍광은 경이로웠다. 한여름 날씨임에도 정상부는 새하얀 만년설로 뒤

덮여 있었다. 새벽 두 시에 해발 4100m의 베이스캠프를 출발해 정상까지 꼬박 일곱 시간 남짓 걸렸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가 희박해져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딛기가 너무 힘들었다. 만년설 구간에 서는 등산화에 아이젠을 착용하고, 피켈로 얼음을 찍으며 올라야 했다.

만년설위에 우뚝 선 해발 5396m의 정상에는 정자 눈이 쌓여 있지 않았다. 또한 5~6명이 앉기 어려울 정도로 비좁았다. 정상 남쪽은 천길 낭떠러지였다. 숨을 고르며 여유를 찾고 고개를 돌려 보니 옥룡설산 등 주변 산들이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들어왔다. 대원들은 정상 표지석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등정의 기쁨을 만끽했다.

하산 길에는 위에서 버둥거리는 꼴뿔한 마리를 봤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없는 5000m 고지대까지 벌은 왜 날아왔을까? 미물은 정정(頂頂)에 오르려 애쓰는 현대인들에게 화두(話頭)를 던진다. 이상과 현실, 안주와 도전. 산에 오르는 이에게 자아와 정체성을 일깨우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표범’ 같은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k

기고

전남의 풍수를 블루 관광 자원으로



김철성 전남도로관리사업소 주무관

최근 전남도는 블루 이코노미 경제 선포석을 갖고 ‘블루 이코노미 전남’을 향한 원대한 비전을 발표했다. 블루 이코노미 5대 전략 중 하나인 ‘남해안의 기적, 신성장 관광 벨트’가 필자 눈에 들어왔다. 골목 없는 공장이라 불리는 관광 산업은 어느 지자체나 선포하는 청정 상품이 아닌가. 남해안 관광 벨트 역시 무한한 상품을 만들어 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값진 자산이다. 필자는 여기에 한 가지 더, 한국 풍수의 비조 탄생지가 바로 전남 영암이기에 풍수를 주제로 한 관광 상품을 발굴해 낳자는 의견을 내 본다.

지난 2012년 2월 풍수를 학문에 반열에 올려놓은 최창조 전 서울대 교수가 순창군을 찾아 ‘순창의 지리적 여건과 관광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최 교수는 당시 “한국인의 의식 저변에

깔린 명당에 대한 관심을 관광 마케팅에 활용한 풍수 기행 코스를 만든다면 색다른 여행 상품이 될 것”이라며 “풍수 기행은 좋은 경치로만 관광을 하는 일반 여행과 다른 테마 관광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남은 말 그대로 풍수의 텃밭이다. 예컨대 지난 2014년은 갑오년으로 말의 해였다. 당시 전남도에서 관내 말 지명을 분석한 결과가 화제로 떠오른 적 있다. 도내 말 지명이 142곳으로 전국 최다였다는 것이다. 다수의 말 명칭은 풍수 형국에 의한 지명으로 풍수 문화유산의 백미 아닌가. 특히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에 있는 운조루는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도 언급됐듯 거북이가 진흙에 들어간 자리라는 금구물니형 명당으로 유명하다. 운조루는 남한의 3대 명당 중에서도 으뜸이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인천에 거주할 때 풍수 서적을 모으며 탐독하다가 풍수 명당인 지금의 전남도청 터에 대한 글을 보고 남약 어느 귀퉁이에 작은 집 한 채 짓고 살고 싶다고 욕심을 낸 바 있다. 남쪽의 ‘의림포’라는 남약은 다섯 마리 용이 여의주를 갖고 노는 형국인 오희쟁주형 명당이다. 게다가 한국 풍류도에서 회자되는 율불선의 삼교가 회통하는 터라

고 한다. 삼교는 무안 승달산, 목포 유달산, 영암 선황산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승달산 동서를 관통하는 도로 개설로 명당(생태계)이 파괴돼가고 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역시 풍수의 문외한이라 도 나주 봉황산과 식산 등의 산줄기를 배산으로 삼고 지식천과 영산강이 합수돼 반달처럼 감싸고 휘도는 곳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운연중에 풍수가 입지 선정에 반영됐을 것이다.

특히 최 교수는 한국 풍수의 중주국이 중국이라는 풍수 역사에 대해 한국 자생 풍수를 제기했다. 한국 풍수의 통설은 신라 말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풍수를 정착시킨 사람이 도선 국사(827-898)라고 하지만, ‘삼국유사’의 석탈해의 반월성 집터와 선덕여왕의 여근국 사건에서 확인되듯 우리나라에는 이미 자생의 풍수적 관념이 있었고, 거기에 중국으로부터 체계화된 풍수가 수입돼 비로소 우리 풍수의 기초가 확립됐다. 최초 공로자가 바로 도선이다.

전남에서의 도선의 행적은 크게 영암, 구례, 광양 등에서 발견된다. 지난 2001년 SBS 풍수 기행에서는 영암에 현존하는 다수의 도선 출생지에 대한 관련 유적들을 소개한 바 있다. 구례군 마산면 사도리는 도선이 지리산 이인에게 자생 풍

수를 전수받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문척면 죽마리에 있는 사성암은 섬진강이 반달처럼 감싸면서 흐르는 곳인 산진수회 명당으로 도선 국사가 공부했던 곳이다. 또한 광양에는 도선의 말년 은거지인 옥룡사지가 있다.

전남은 한국 풍수의 비조인 도선이 태어난 곳이기도, 조금 과장한다면 한국 풍수의 성지가 되는 셈이다. 그러니 전남 곳곳에 남아있는 도선의 자취 및 전남 풍수 유적 및 자료들을 모아서 ‘전남 풍수 자료집’같은 거러도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풍수 공부를 한 사람들은 잘 안다. 풍수 속에는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와 고스란히 박혀있는 살아 있는 화석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풍수 자료의 가치는 블루 오션의 든든한 밑천이 될 것이다.

언젠가는 영암에 한국풍수박물관 조성의 공감대가 형성될 날도 올 것이다. 만약 풍수박물관이 세워진다면 그곳에서는 풍수 유물의 보존 전시뿐 아니라 풍수학교도 열어 난개발에 의한 자연 파괴를 막을 수 있을 생태 이상으로서의 풍수의 진면목이 전수됐으면 한다. 또 한국 자생 풍수를 주장했던 풍수 학인들의 풍수 관련 유물도 보존·전시한다면 의미 있는 인문학 볼거리로 관광객들의 지적 욕망까지 충족해줄 수 있을 것이다.

독자투고·기고 독자와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33/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b>光州日報</b>		<b>The Kwangju Ilbo</b>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政</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체 육 부 220-0633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일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